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

김 보 명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국문초록

페미니즘의 가시화 및 대중화와 더불어 젠더 갈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페미니즘을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경험하는 청년 세대에 있어서 젠더 평등은 세대 및 계층간 재분배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치열한 논쟁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디지털 공간과 언론보도 등에서 부각된 젠더 갈등의 사례들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반)페미니즘 담론과 실천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성평등 (채용)정책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남성 피해자 서사와 역차별 주장, 그리고 유사-페미니즘으로 부상하는 '젠더 이퀄리즘' 현상 등은 반페미니즘(antifeminism)의 새로운 문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반페미니즘 담론은 탈맥락화된 공정성 주장과 만나거나 (양)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을 재활용한다. 우리 시대의 '젠더 갈등'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삶의 불안과 경쟁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하지만 단순히 '헬조선'과 '삼포세대'의 부산물로만 취급될 수는 없다. '젠더 갈등'은 변화하는 젠더 질서가 한국사회의 계층적·세대적 불평등의 중층적 구조와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자 이러한 중층적 불평등 구조 위에 더해지는 신자유주의적 개인화 과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주제어 : 페미니즘, 젠더 갈등, 공정성, 성평등 정책

* 이 논문은 2019년 5월 31일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한 《갈등과 분열의 한국사회와 '공동체'의 재구성》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재구성하였으며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논문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제시해주신 심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1. 페미니즘과 젠더 갈등

페미니즘이 대중성과 가시성을 확보하게 되면서¹⁾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갈등의 표출 또한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20대 및 청년세대 내부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2019년 1월 15일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²⁾ 결과에 따르면 해당 조사에 응답한 20대의 여성들과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로 우리사회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고 응답하였지만 실제로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해화역 시위, 탈코르셋, 안희정 사건 1심 판결 결과 등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는 성별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2017년 7월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20대 여성의 50% 이상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미투 선언과 낙태죄 폐지와 해화역 시위에 대해 각각 88%, 74%, 60%의 비율로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한편 같은 시점 기준 20대 남성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14%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미투 선언과 낙태죄 폐지와 해화역 시위에 대한 지지는 각각 56%, 47%, 19%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사회 여성혐오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의 7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27%가 그렇다고 응답하면서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었다. 달리 말해, 해당 설문에 응답한 20대의 여성들과 남성들은 젠더 이슈와 성차별 현상 자체에 대해서

-
- 1) 메갈리아와 강남역과 촛불광장을 지나 페미니즘의 재부상과 대중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2018년 1월에 방송된 서지현 검사의 JTBC인터뷰는 미투 선언이라는 새로운 반성폭력 실천의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같은 해 5월에 발생한 ‘홍대 미술수업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은 5차례에 걸쳐 해화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시작점이 되었다. 2016년부터 이어져온 낙태죄 폐지운동은 2019년 4월 11일, 66년간 존속되어온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한국사회 재생산 담론 및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디지털 공간과 대중문화의 장을 경유하며 재부상한 페미니즘은 강남역 사건과 촛불광장을 거치면서 거리와 광장의 페미니즘으로 확장되었으며, 미투 선언과 해화역 시위와 낙태죄 폐지 요구로 이어진 여성들의 목소리는 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질문하였다. 김보명, 「촛불광장 이후의 젠더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 『안과밖』 46호, 2019, 179-200쪽.
 -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1월 15일자 보도자료 「20대 여성 10중 5명, 남성 10명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인식 ...」 참조.

는 공통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나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등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지지와 비판에 있어서는 상당한 간극을 보인다. 이는 앞선 세대와 비교해 볼 때 페미니즘을 더욱 일상적으로 접하게 된 20대와 청년세대에서 젠더 정치학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공공정책이나 대중담론의 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페미니즘 담론을 보다 친숙하고 대중화된 방식으로 접하는 청년세대에게 있어서 페미니즘은 오히려 더 첨예한 갈등과 경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세대는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 또한 자신들의 경험과 정체성,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페미니즘 정치학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 수용, 재구성의 과정에서 페미니즘과 ‘성평등’은 신자유주의적 생존의 논리와 맞물리며 재해석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해학적 시위 등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여성’ 범주에 대한 주장이 그 한 가지 측면이라면, 공정성과 역차별, 그리고 ‘젠더 이퀄리즘’을 외치면서 여성정책을 반대하는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는 또 다른 측면을 구성한다. 양쪽 모두에서 성평등은 사회적·집합적 변화가 아닌 이미 닫힌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화와 자원의 배분 문제로 축소된다.

페미니즘이 제도나 이론의 문제가 아닌 일상의 안전과 생존의 문제가 된 청년세대에게 있어서 젠더 정치학은 자원과 권력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접근(권)의 문제로 번역된다. 청년세대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통해 자신의 현재적 삶의 양식과 미래의 가능성을 조망하고 또 변화시키고자 하는 반면, 청년세대 남성들은 이를 남성혐오, 역차별, 혹은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오)인식하고 반발한다. 성평등 정책이 제도화되고 페미니즘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획득하는 가시성(visibility)은 실제로 존재하는 성차별의 현실과 괴리된 ‘역차별’의 감각을 만들어낸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구조적 불평등과 문화적으로 일상화된 여성혐오는 이미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때문에 ‘차별’로 인지되지 않는 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더해지는 정책과 제도적 실천은 상대적으로 높은 (초)가시성을 획득하면서 ‘역차별’의 감각을 빠르게 확산된다.³⁾ 최근 한국사회에서 대두되는 반페미니즘 및 반다문화주

3) 손아람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자는 눈앞에 보

의 담론이 ‘역차별’과 ‘공정성’의 키워드로 삼는 현상은 이러한 경향성을 반영한다.⁴⁾ 남성들과 내국인들은 군복무와 세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여성들과 이주민들은 그 혜택(만)을 누린다는 오해와 비난이 그것이다.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여성들과 이주민들을 ‘무임승차자’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과 제도의 정당성을 문제삼는다. <일간 베스트>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김치녀’ 담론이 개별 여성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그 문법으로 삼았다면 ‘역차별’과 ‘공정성’을 키워드로 삼는 반페미니즘 담론은 여성경찰채용제도라든가 성폭력사건 판결 등과 같은 공적 제도와 정책을 그 비판의 중심에 둔다. 2018년 11월에 일어난 ‘이수역 사건’, 2018년 9월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 논란, 2018년 5월에 일어나 해화역 시위의 시발점이 된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 그리고 2019년 5월에 있었던 ‘대림동 여경사건’ 등은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될 수 있다. 일련의 사례들에서 나타난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의 담론은 각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적 행위자인 여성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이 사건들에 대해 제도적 개입과 법적 판단을 담당할 공적 권력의 담지자로서의 경찰, 법원,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발을 포함하였다. ‘이수역 폭행 사건’의 경우 술자리에서 일어난 다툼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거치면서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였으며,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남성들을 거리로 불러냈다.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여

이[는]” 대상이기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 작가는 현재의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 그리고 남성들의 피해자의식을 ‘차별비용’으로 접근한다. 그간 가부장제가 정상화한 남성지배의 구조 속에서 남성들은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누리왔지만, 변화하는 젠더 질서는 그 특권과 책임 간의 방정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했던 과거와 달리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이성에 연애와 결혼에서 남성은 더 이상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남성지배의 약화를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실제로 여성들에게 자원과 권력을 나누어야 남성들에게 부여된 군복무와 생계부양을 비롯한 각종 부담 또한 나눌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책임의 과중함을 외치는 남성들이 체감하는 ‘역차별’은 페미니즘과 여성들 탓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제의 역사적 효과이자 ‘비용’이라는 통찰이다. 손아람 작가의 세바시 강연 「차별은 비용을 치른다([https://www.youtube.com/watch? v=cYuFnDyARBw](https://www.youtube.com/watch?v=cYuFnDyARBw))」 참조.

4) 김성윤,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 『문화과학』 93호, 2018, 93-119쪽.

성 피의자에 대해 이루어진 경찰의 편파적이면서 동시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은 사법정의 불평등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로 이어졌다. 그리고 ‘대림동 여경사건’의 경우 특정 여성경찰의 대응에 대한 논란은 ‘여성경찰’ 일반에 대한 불신과 ‘무용론’으로 곧 확대되면서 경찰채용제도 및 현장에서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지침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성평등은 경찰, 법원, 정부 등의 공적 기구들을 통해 매개되는 기회와 자원의 분배, 그리고 보상과 처벌의 문제로 접근되었다.

‘젠더 갈등’이 이슈로 부상하자 이를 진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정책기구의 시도들 또한 이어졌다. <위마드>를 젠더 갈등과 남성혐오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며 ‘전쟁’을 선언한 바른미래당 두 최고위원의 정치적 행보⁵⁾에서부터, 20대 남성의 낮은 정권 지지율의 원인을 젠더 갈등에서 찾고 페미니즘을 20대 여성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명명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분석보고서⁶⁾와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을 해결하겠노라 나선 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의 토론회⁷⁾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이 ‘젠더 갈등’을 대하는 태도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했다. <일간 베스트>의 등장에서부터 청년세대 젠더 갈등의 구도를 꾸준히 추적해온 시사인은 ‘20대 남자현상’ 특집기사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새롭게 응집되고 있는 청년세대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정서와 논리를 분석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세대 간에 변

5) 중앙일보, 「하태경 이준석은 왜 ‘위마드’와 전면전에 나섰다», 2019.01.08.

6) 현 정권에 대한 20대 남성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찾고자 시작된 이 조사는 결국 그 원인을 현 정권의 친여성 정책과 그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반발에서 찾았다. 이 보고서는 20대 여성들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 이기주의’ 감성의 진보집단”으로, 그리고 20대 남성들을 “경제적 생존권과 실리주의를 우선시하면서 정치적 유동성이 강한 실용주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여성을 감정의 주체로 보고 남성을 합리성의 주체로 보면서 이미 그 자체로 성별 이분법과 여성혐오를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층 양극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초래하는 삶의 위기들을 청년세대 내부의 젠더 갈등의 문제로 축소하는 한계를 보인다. 경향신문, 「“20대 여성은 페미니즘 등 집단이기주의로 무장하고 남성혐오 확산” 대통령 정책위 분석보고서 보니», 2019.2.27.

7) 오마이뉴스, 「젠더 갈등 푼다더니 ... 표창원 의원, 이게 최선입니까», 2019.4.15.

8) 시사인,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2019.4.15.

시사인, 「20대 남자 현상, ‘반 페미니즘’ 전사들의 탄생」, 2019.4.22.

화하는 남성성의 규범과 성차별주의의 유형을 조사 및 분석하면서 젠더 갈등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동시에 이를 보다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변동 과정의 한 측면으로 접근하였다.⁹⁾ ‘젠더 갈등’이 페미니즘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젠더 평등을 위한 실천들, 그리고 페미니즘이 만들어내는 젠더 질서에서의 변화들에 대한 반발과 공격으로 나타나는 반페미니즘의 정서가 서로 부딪치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긴장과 갈등의 과정을 지칭한다면, 이것은 휘발적인 정치적 수사나 단편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일탈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평등한 세계가 도래할 때까지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나타날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 정치학이 이미 오래 전에 ‘발견’하고 주장했듯이 젠더는 양성 간의 조화롭고 상보적인 차이나 관계가 아닌 위계와 차별과 폭력을 동반하는 억압적 구조이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젠더 갈등은 이미 가부장제와 이성애 질서에 내재된 요소일 뿐 페미니즘이 만들어내는 과잉적 현상이 아니다.¹⁰⁾ 갈등은 젠더에 내재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에서 젠더 갈등은 호주제 폐지운동, 군가산점제 위헌소송, 성매매특별법 제정 국면 등에서 나타났다.¹¹⁾ 특히 군가산점제는 한국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가장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호주제가 상징적 가치만 남은 과거의 유산으로 취급되거나 성매매가 일탈적 남성들의 비도덕적 행위로 취급되었던 것에 반해 군대는 한국사회의 가장 규범적인 남성성, 즉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정박점이기 때문이다.¹²⁾ 군가산점제 위

시사인, 「20대 남자현상은 왜 생겼나」, 2019.4.29.

- 9)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주최,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은 분석한다』 토론회 자료집, 2019.4.14.
- 10) 정희진,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외,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2016.
- 11) 이재경, 「한국사회 젠더 갈등과 ‘사회 통합」, 『저스티스』 제134권 2호, 2013, 94-109쪽.
- 12) 지배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 개념은 남성성이 하나의 모델이 아닌 위계적으로 배치되는, 그리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는 남성성들(masculinities)의 배치됨을 제안한다. 한 사회에서 작동하는 지배적 남성성은 그 자체로 다수의 남성들이 체현하거나 수행하는 남성성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모델로서의 위치를 갖는, 따라서 다른 남성성의 모델들이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배치되고 수행되는 남성성의 유형을 지칭한다. R. W. Connell and James W. Messerschmidt,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and*

현소송은 “성차별 개선이 남성의 기득권과 대립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 대표적인 사건”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남성들 사이의 강력한 반페미니즘 정서가 형성되는 기점이 되었다.¹³⁾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특별법이 도전한 남성성이 일정 부분 구시대적이거나 일탈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남성성이었다면, 균가산점제가 충돌한 대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규범적이고 지배적인 남성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젠더 갈등은 페미니즘이 한 사회의 지배적 남성성의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도전하면서 주류적 젠더질서에 도전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된다. 따라서 ‘젠더 갈등’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거나 병리적인 현상으로 치부되기보다는 젠더 질서의 불안정성과 변화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징후로 독해될 수 있다.

II. 공정한 차별과 불공정한 페미니즘

다양한 국가들에서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은 그것이 가시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반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¹⁴⁾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과 비난은 또한 성주류화 정책과 성평등 및 여성학 교육에 대한 반발에서부터 대중문화 및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와 양식을 가로질러 나타난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과 공격은 또한 남성성과 남성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요구, 그리고 ‘자연스러운’ 젠더 질서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최근 유럽에서 등장한 ‘반젠더 캠페인(anti-gender campaign)’은 페미니즘을 저출산과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비난하면서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제약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¹⁵⁾ 또한 페미니즘의 부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성성의 각본은 여

Society 19(6), 2005, pp.829-859.

13) 유정미, 「반격의 양성평등에서 (양)성평등의 재정립으로」, 『한국여성학』 35권 2호, 2019, 1-35쪽, 7쪽.

14) Ana Jordan, “Conceptualizing Backlash: (UK) Men’s Rights Groups, Anti-Feminism, and Postfeminism,” *Canadian Journal of Women and the Law* 28(1), 2016, pp.18-44.

15) Bianka Vida, “New Waves of Anti-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성을 지배하기보다는 보호하는 온정적 가부장을 ‘진짜 남자’로 재정의하거나 결혼과 생계부양을 거부하는 탈가족화의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며, 때로는 남성을 페미니즘과 여성정책이 만들어내는 ‘역차별’의 피해자이자 권력 투쟁의 약자로 묘사하기도 한다. 반페미니즘의 문법은 생물학적·문화적 본질주의나 도덕적 공황(moral panic)에서부터 공정성 담론과 여성혐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다.

최근의 한국사회의 ‘젠더 갈등’의 구도에서는 ‘공정성’의 논리와 그에 따른 ‘역차별’의 감각은 남성들, 특히 20대 남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분노와 반발을 정의하는 코드로 부상하고 있다.¹⁶⁾ 성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구조적인 차별이나 격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즉 남녀평등한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을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은 남성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이자 역차별이며, 따라서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차별이나 혐오가 아닌 ‘진정한 평등’을 위한 저항적 실천이라는 반페미니즘의 문법이 등장한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취업과 결혼 이전의, 즉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나 성차별, 그리고 가족 내 재생산 노동의 성별분업과 그것이 초래하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20대와 청년세대에서 두드러진다. 반페미니즘의 렌즈에 비친 여성들은 혐오와 차별의 피해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또래 남성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고 대학 진학 후에는 남성들이 군대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동안 스펙을 쌓은 후 각종 여성정책의 혜택을 받아 공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선점하는 위협적인 경

Strategies in the European Uni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Matters* 27(2), 2019, pp.1-4.

- 16) 유사한 구도는 인천공항과 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공영역에서 시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10년이 넘는 오랜 투쟁 끝에, 그러나 정치적 해결이 아닌 시민 종교단체의 중재를 통해 결국 복직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정규직의 문턱을 넘은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집단행동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에둘러가는 ‘불정공 행위’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양극화와 경쟁이 동시에 심화되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예외적으로 뛰어난 개인들의 성공담과 자기계발의 이야기들이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구조적 불평등 자체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수용되지만 개인적 노력과 경쟁의 원칙을 깨고 국가와 정치의 영역을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행위는 강하게 비난 받는다. 정태석 외, 「공정성의 역설」, 『시민과 세계』 32호, 2018, 137-160쪽.

쟁자들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이 아닌 정체성의 정치학에 기반한 집합 행동을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페미니즘 실천은 각자도생의 법칙을 깨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비난과 처벌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회정의의 회복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1. 페미니즘 불공정론과 (신)본질주의

2019년 5월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림동 경찰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이 올라왔다. 약 14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두 명의 중년 남성들과 대치하는 2인 1조 남녀경찰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동영상에서 여성경찰은 피의자를 한 번에, 그리고 단독으로 제압하는 데 실패하면서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료 남성경찰을 위협에 빠뜨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이라는 비난을 받았다.¹⁷⁾ 또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여성들이 한 사회의 치안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성경찰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성별 분리채용제도를 실시하는 정부와 여성정책이 불공정할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해당 사건과 동영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경무용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은 동영상에 담긴 여성경찰의 행동이 매뉴얼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었음을 밝히는 한편,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삭제된 장면, 즉 비난의 대상이 된 여성경찰이 동료 경찰과 함께 피의자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포함된 1분 59초 분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경찰은 또한 논란이 된 여성경찰 채용 과정에서의 체력 검정 기준에 대해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¹⁸⁾ 경찰 내 여성들로 구성된 학습모임인 <경찰젠더연구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여성경찰에 대한 비난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논의의 중심이 여성경찰 무용론이 아닌 ‘공권력에 경시풍조’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

17) 매일경제, 「대림동 여경 논란...경찰 원본 영상 공개에도 비난 더욱 거세져」, 2019.5.19.

18) 경향신문, 「‘대림동 여경’ 논란이 뜻하는 것」, 2019.5.19.

연합뉴스, 「경찰청장 “대림동 여경, 집착·지적인 대응...경찰 대표해 감사”」, 2019.5.21.

한다고 지적하였다.¹⁹⁾ 경찰은 또한 2019년 5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현장 상황과 그에 따른 경찰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대응력을 5단계로 정의하는 한편, 경찰봉이나 전자 충격기 등의 기구 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다.²⁰⁾ 성평등과 젠더정의의 담론은 공정성, 치안, 그리고 공권력의 담론과 맞물리고 충돌하면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구도 속에서 여성경찰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공정성과 공동체 안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정당화되거나 반대로 (여성이나 여성경찰이 아닌) 공권력 자체에 대한 경시로 간주되었다. 달리 말해 ‘대립동 여경사건’을 중심으로 형성된 담론장에서 성평등과 젠더정의의 의제는 공정성, 치안, 공권력의 의제로 흡수되거나 치환되었다.

‘대립동 여경사건’을 계기로 재등장한 ‘여성경찰무용론’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젠더 이분법에 토대를 두는 생물학적 본질주의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탈맥락화된 ‘능력주의(meritocracy)’와 만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한 경찰공무원 사이트 올라온 “여경들의 실체입니다”라는 게시물에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4명의 여성경찰과 1명의 남성시민이 서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과 함께 여성경찰들이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 덧붙여졌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성경찰은 치안조무사”, “세금낭비”, “여경들을 교통정리라도 했어야” 등의 댓글로 응답하였다.²¹⁾ 사실상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포함되지 않은, 4명의 여성들과 1명의 남성, 그리고 전복된 차량이 함께 등장하는 사진은 이를 보는 이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남성 신체에 역능을 부여하고 여성 신체로부터 수동성과 무능을 읽어내게 했다. 여성경찰의 (여성으로 인지되는) 몸과 성은 그 자체로 무능함과 무책임함의 표상이 되었으며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역할 및 책임과는 공존불가능한 모

19) 중앙일보, 「“여경 비하 멈춰달라” 경찰젠더연구회는 어떤 곳?」, 2019.5.21.

20) 경찰청 보도자료, 「전국 경찰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기준 만들어」, 2019.5.22.

21) 중앙일보, 「“교통사고 났는데 여경들은 ‘어떡해’라고만 하더라”...진실은?」, 2018.09.29. BBC코리아, 「대립동 여경: 영상 논란이 남긴 질문 3가지」, 2019.5.20.

순이 되었다.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한 여성이 경찰의 업무에 적합할 수 없다는 주장, 그렇기에 현 정권이 추진하는 여성경찰 채용확대정책이 부당하며 나아가 치안 공백과 국민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따라서 여성경찰의 체력검정을 강화하거나 남성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는 ‘여성’으로 간주되는 신체와 ‘경찰’이라는 직무 수행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하며²²⁾ 따라서 ‘여성경찰’의 존재는 애초에 불가능한 모순이며, 현재의 여성경찰들은 페미니즘의 압력과 여성정책의 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부자연스럽고 불공정한 고용정책의 산물이라는 인식, 그리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찰들이 (앞서 타고난 불변의 속성으로 간주되었던) 성적 차이를 넘어서는 체력과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모순적 요구가 공존한다. 덧붙여 이러한 극복할 수 없는 성적 차이, 혹은 신체적 열등성을 갖는 여성들이 공동체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조장한 정부와 여성정책은 모종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받는다. 신체-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이 국가와 페미니즘의 지원(empowerment)을 받아 남성들의 역할과 기회를 뺏어간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전개에서 성차별의 오래된 논리이자 방식인 생물학적 본질주의는 경쟁과 불안의 풍경 속에서 자라나는 ‘공정성’의 담론과 결합하면서 여성혐오를 만들어낸다. 여성경찰의 무능력은 타고난 신체적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상상되지만, 동시에 여성경찰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극복 불가능한 성적 차이를 넘어서 남성과 동등한 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모순적 논리의 순환 속에서 ‘여성경찰’은 불가능한 모순적 범주가 된다.

‘여성경찰무용론’의 반대편에는 경찰의 업무가 ‘체력’만으로 정의되거나 수행될 수 없는 다양한 업무와 서비스를 포함하며, 특히 여성대상 범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사건을 조사할 담당자로서 여성경찰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²³⁾ 특히 여성경찰이

22) 이러한 주장들은 여성을 생물학적 범주로 환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가 자체를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요건, 즉 진정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으로 취급하고 있다. 김정혜, 「경찰공무원 성별구분모집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법학논집』 22권 2호, 2017, 67-104쪽.

23) 국민일보, 「민감률 “여경 확대 긍정적…치안 수요 맞춰 경찰 내 인력 변화해야」, 2018.7.30.

(성추행 시비 없이) 여성 시위 참여자들을 통제하는 데 필요하다든지, 여성 경찰이 (젠더 감수성을 갖고) 여성 피해자를 상담 및 조사하는 데 더 적절할 것이라는 논리는 여성경찰 채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례와 근거로 자주 제시되며, 실제로 이러한 기대와 논리에 따라 실무 현장에서 여성경찰의 업무가 결정되기도 한다.²⁴⁾ 그러나 여성경찰의 필요성과 업무를 여성의 신체적 동일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에 기대어 정당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 또한 ‘여성경찰무용론’과 마찬가지로 ‘여성’ 범주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을 반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본질주의적 담론이 ‘성평등’ 정책의 기획 및 집행 과정 속에서 제도적으로 반복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순과 문제를 예고한다. 보수개신교의 반-동성에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대립구도²⁵⁾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성평등에 대한 기계적 접근은, 기존의 젠더 위계를 해체하고 전복하기 위해 고안된 여성정책들이 모순적으로 젠더 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를 정상화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성들이 동일한 성(same-sex)이며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 성적 차이나 욕망, 혹은 지배와 폭력 또한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이성애 중심적인 상상력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와 같은 ‘여성시위’ 현장에 여성경찰들이 배치되는 근거가 되면서 이성애규범성과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재생산한다. 또한 (생물학적) 여성이 (사회문화적)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성적 폭력과 차별의 경험들이, 그 경험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경찰의 과정이나 노력 없이, 경험 그 자체로 ‘젠더 감수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페미니스트 의식(feminist consciousness)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속성을 단순화한다. 특히 경찰조직이나 법조계 등에서 여성경찰이나 여성검사 등에게 성폭력·가정폭력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여성 및 아동 피해자 상담을 ‘전문성’의 이름으로 담당하게 하는 방식의 업무 배치는, 여성경찰에게 접대나 홍보 등의 ‘여성적’ 업무의 수행을 요구했던 과거의 관행과 근본적으로 구별되기 어렵다. 오히려 전자의 경우, 경찰조직이나 사법정의 시스템 자체의 남성중심적 세계관과 성차별적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제

24) 전지혜, 『경찰채용시 성별구분모집관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논문, 2007.

25) 유정미, 위의 글, 17쪽.

도적이고 관료화된 방식으로 덧붙여지는 ‘양성평등정책’이 갖는 한계와 모순을 보여주면서, 페미니즘(의 제도화) 이후의 페미니즘을 고민하게 만든다.

2. ‘20대 남자’ 현상과 ‘(양)성평등’ 정책의 명암

20대 남성들은 또래 여성들의 페미니즘 실천과 제도화된 여성정책 모두를 가장 강력하게 견제하고 반대하는 집단으로 지목된다. 20대 남성들은 ‘여성혐오’의 발화자들인 동시에 반페미니즘의 전사들이며, 또한 기성세대의 가부장적 남성성으로부터 이탈하는 새로운 남성성의 주체들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모순적이면서도 다원적이다. 이들은 성평등과 페미니즘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고 말하면서 반페미니즘의 대열에 합류한다. 성평등이 시대적 명제로 부상하고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앞에서 20대 남성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부는 남성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고수하며 ‘골수 마초이즘’을, 또 다른 일부는 모종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성의 권위를 유지하는 ‘온정적 가부장주의’를,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가부장제가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지배적 남성성으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루저’ 혹은 ‘초식남’의 모델을 선택하면서 새로운 남성성의 각본을 찾아나간다.²⁶⁾ <일간 베스트> 유저들처럼 스스로를 ‘루저’로 정체화하면서 동시에 여성혐오를 일용할 남성성과 자존감의 원천으로 삼는 이들이 있다면, 반대로 변화하는 젠더 관계를 인식하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현실을 조용히 수긍하는 남성들, 나아가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을 내려놓고 육아와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들이 등장하거나 보다 평등하고 개인화된 친밀성의 각본을 추구하는 남성들이 있다.²⁷⁾ 새로운 남성성의 모델들과 친밀성의 각본들의 등장은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의 변동 속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가 재배열되고 있으며, 20대와 청년세대

26) 김성운, 앞의 글, 100쪽.

27) 엄기호, 「신자유주의 이후, 새로운 남성성의 가능성/불가능성」,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2011.

의 여성들과 남성들이 단지 그 변화에 적응할 뿐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젠더 규범과 정체성, 그리고 생애전망을 모색하고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변화의 조짐들 속에서 페미니즘 또한 ‘성평등’의 방법론과 정당성을 새롭게 설득해야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갖게 된다.

변화하는 남성성의 각본과 더불어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남성을 더 이상 권력의 주체가 아닌 페미니즘과 국가가 손잡고 행사하는 권력의 피해자로 보는 인식과 감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사인의 ‘20대 남자’ 특집 기사를 인용하자면 “20대 남성에게 페미니즘은 무엇보다 권력의 문제”로 인식된다.²⁸⁾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거나 혹은 구조적 차별이 있더라도 페미니즘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믿는 20대 남성들은 때로는 공격적인 여성혐오를, 그리고 때로는 ‘젠더 이퀄리즘’으로 명명되는 새로운 모순적인 유사-페미니즘(pseudo-feminism)의 조합을 만들어낸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과 공격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지만 이들은 여성정책과 페미니즘을 (부당한) 권력행사의 주체로, 그리고 20대 남성들을 그 피해자로 보는 정서와 관점을 공유한다. 자주 이야기되는 것처럼 20대 남성들은 아직 노동시장의 성차별이나 이성애 결혼 및 가족제도가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희생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도, 그렇다고 아버지 세대의 남성들처럼 가부장제의 공고한 남성연대와 그것이 주는 권력을 확실하게 누리지 못한, 그리고 이에 더해 세대적·계층적 계층화의 가장 아래층에 있지만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성평등’의 압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집단이다.²⁹⁾ 이러한 맥락 속에서 20대 남성들은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는 “다중적 압력” 즉,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의 실제적 압력(‘젊은 남성 취패는 기득권 꼴파초 남성’), “기성 젠더 구조에 의한 성적 규범으로부터의 압력(‘남자로 사는 고통’), 그리고 “부흥하는 페미니즘의 도전으로부터 나오는 압력(‘그거에 들러 붙는 게 꼴페미’)”를 호소하며 ‘피해자’ 혹은 ‘약자’로서의 정체성은 만들어가게 된다.³⁰⁾ 달리 말해 가부장제의

28) 시사인,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2019.4.15.

29) 김수아·이예슬,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의 구축」, 『한국여성학』 33권 3호, 2017, 67-107쪽.

실질적 혜택은 다 누렸지만 이제 와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20대 남성들에게 성평등을 요구하는 586 세대의 남성들과 그들이 베푸는 정책적 기회 속에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20대 여성들 사이에 끼인 20대 남성들은 더 이상 특권(privilege)의 주체가 아닌 정치적 게임의 ‘희생양’이나 ‘피해자’라는 인식이 생겨난다.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들의 적대감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여성 가족부의 여성정책이 갖는 취약한 위상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작성된 여성과 여성정책 관련 기사들에서 여성가족부는 편파적으로 여성의 입장과 이해관계만 주장하면서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무능하고 편향된 정책기구로 비난받고 있다.³¹⁾ 지난 20년간 국가 주도 하에 추진되어온 성평등 정책 및 성주류화 전략은 대중적 인식에서뿐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제도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제도화와 더불어 진행된 여성정책의 성장은 ‘성주류화’, ‘성인지정책’, ‘젠더 감수성’ 등과 같은 일련의 용어들을 익숙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성평등은 각종 통계 수치와 지표 등으로 도식화되면서 관료화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³²⁾ 페미니즘과 여성정책이 상대적으로 긴 역사적 궤적 속에서 두꺼운 대중적 지지층을 형성하고 정치적 의제로 자리 잡은 영미나 유럽 국가들과 달리 IMF 이후 빠르게 재편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가족질서의 변동과 맞물리면서 ‘성평등’이 국가정책의 공식 언어로 수용된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취약하고 유동적인 위상을 갖는다. 이는 단지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에 위임되는 정책적 권한과 자원이 부족한 현실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목적이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휘발적으로 재정의 되는 현실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담론이 부상하고 ‘건강가족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변경되고,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변화라든가, 보다 최근에는 정책용어에서 ‘성평등’을 폐기하고 이성애규범적 질서에 부합하는 ‘양성평

30) 김성윤, 앞의 글, 104쪽.

31) 정사강·홍지아, 「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미디어, 젠더, 문화』 34권 1호, 2019, 209-253쪽.

32) 황영주, 「강건한 “국가,” “페미니즘”의 약화」, 『21세기 정치학회보』 19집 1호, 2009, 329-352쪽.

등’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보수개신교의 요구가 여성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2014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되어 19년간 여성정책의 인식론적 기반을 정의했던 ‘여성발전기본법’의 온정주의적 관점을 대체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성평등’을 젠더 불평등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개입과 해체의 과정이 아닌 기성 사회 질서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정의되는) 여성들과 남성들 간에 일어나는 동등한 기회나 자원의 분배로 축소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³³⁾ 일련의 흐름 속에서 여성정책은 구조화된 불평등을 시정해나가는 공적 개입과 변화의 과정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우대’ 정책”으로 취급된다.³⁴⁾

3. 차별과 혐오 없는 반페미니즘: ‘젠더 이퀄리즘’과 양성평등한 세계

오늘날의 반페미니즘과 포스트페미니즘은 혐오와 차별과 같은 부정의 문법 뿐 아니라 ‘(진정한) 평등’이라든가 ‘결과위’ 등과 같은 긍정의 문법 또한 두드러진다. 오늘날 반페미니즘 담론에 동참하는 이들은 더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하다거나 차별받아 마땅하다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 즉 ‘양성평등’의 대의에 동의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전통적인 가부장이나 여성혐오가(misogynist)로부터 구별한다.³⁵⁾ 이들은 페미니즘이 여성과 남성을 지나치게 구별함으로써 성별 이분법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관계없이 여성을 피해자로 단정하면서 남성을 배척하면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진정한 평등’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페미니즘이 진정한 평등을 원한다면 ‘여성’

33) 배은경, 「젠더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한국여성학』 32권 1호, 2016, 1-45쪽.

34) 신경아, 「젠더 갈등의 사회학」, 『황해문화』 97호, 2017, 16-35쪽.

35)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의 20대-30대 남성들이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허위의식이나 뻔뻔한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지향하는 평등과 정의의 감각을 반영하는 진실 주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들은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가 말하는 평등과 정의의 언어를 전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고 재해석하는 실천 속에서 반페미니즘과 반다문화주의의 논리를 만들어간다. 김성윤, 2018, 95쪽.

의 입장과 이해관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몇 해 전 나무위키에서 등장하여 논란이 되었던 ‘젠더 이퀄리즘’이라는 신조어³⁶⁾와 그것이 보여주는 남녀평등한 세계에 대한 상상력은 반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의 언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면서 페미니즘을 탈정치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³⁷⁾ 성평등의 대의는 수용하지만 성차별의 현실과 구조는 부정하는 ‘젠더 이퀄리즘’의 문법은 대립과 갈등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양성평등한 세계를 상상하면서 사실상 젠더를 탈정치적이고 중립적인 차이로 왜곡 혹은 재정의한다.

2016년 8월에 처음 게시된 ‘젠더 이퀄리즘’은 <메갈리아>와 <위마드>로 대변되는 20대 여성들의 페미니즘 실천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젠더 이퀄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 따르면 페미니즘과 ‘젠더 이퀄리즘’의 차이는 “기존의 페미니즘이 주로 여성에 중심을 두고 그들의 관점에서 느끼는 억압과 불평등을 해소하려 했다면 이퀄리즘에서는 심리학적으로 인간 고유의 본능에서 비롯된 ‘나와 남을 구분 지으려는 일명 타자화(他者化) 현상’을 지양하고자 모든 성별을 동등한 주체이자 객체로 두고 동일한 인간으로 대우

36) 페미위키(“젠더 이퀄리즘” 엔트리), 경향신문 기사(2017.01.13.), 한국경제 기사(2017.2.1.) 등에서 지적되듯 ‘젠더 이퀄리즘’이라는 표현이 학문, 정책, 사회운동 등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 없을 뿐 아니라 일상 언어로도 매우 어색한 신조어이다. 그런 이유에서 페미위키는 이를 “젠더 이퀄리즘 날조사건”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덧붙여, 젠더 이퀄리즘의 한 변주로서, 쿼어문화축제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개신교 집단이 주장하는 양성평등과 그것의 비정상적인 번역어라 할 수 있는 ‘two sex equalism’도 그 변주로 등장하였다.

37) ‘젠더 이퀄리즘’의 등장은 인터넷 공간을 매개삼아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 및 탈진실의 정치학의 한 사례를 보여주기도 한다. 2016년 8월 2일 나무위키에서 등장했다고 알려진 ‘젠더 이퀄리즘’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도 실제로 존재하거나 활용된 적 없는 가상의 가치관 및 실천을 마치 서구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실제로 등장했던 개념이나 지향인 것처럼 주장하고 인용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통용되었다. 6개월간의 논란 끝인 2017년 1월 나무위키 측은 ‘젠더 이퀄리즘’을 ‘나무위키 성평등주의 날조사건’으로 수정하고 원글 작성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가짜뉴스와 탈진실의 정치학은 역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전혀 실재한 적도, 그렇다고 검증된 적도 없지만, ‘마치 진실인 듯한’ 설득력과 효과를 갖는 거짓말들을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함으로써 대중의 의식과 공론장을 왜곡한다. 경향신문, 「페미니즘 비판하던 ‘이퀄리즘’은 누리꾼이 만들어낸 ‘창작품」, 2017.1.31.

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데 있다.³⁸⁾ 페미니즘이 성차별을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여성권리의 향상과 남성권리의 박탈”을 요구하는 반면, 이퀄리즘은 “여성의 권리나 지위가 낮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며, 또한 “같은 여성이라도 환경과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뿐더러”, “평균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낮다 하더라도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 설명된다. 성차별과 여성억압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는 “이미 여성을 남성과는 다른 객체로 타자화하는 시각이 담겨 있으므로 오히려 남녀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덧붙여진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해볼 때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군복무의 의무를 질 것을 주장하는 것이나 낙태에 있어서는 중립을 유지하거나 남녀 모두 처벌받을 것을 주장하는 것이 성평등의 사례가 된다. 유사한 논리는 디지털 공간을 떠도는 ‘젠더 이퀄리즘 십계명’에서도 나타난다. 이 계명에는 “여성을 도와주지 마라”, “여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마라”, “여성에게 같은 일을 가르쳐라”, “이성 간의 언행에 신경 쓰라”, “의무와 책임을 알게 하라”, “페미니즘과 마초이즘(남성우월주의)을 버려라”, “여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우하라” 등이 십계명으로 제시되며,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다”, “이성 간에는 생각이나 언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우해야 진정한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 등이 부연된다.

‘젠더 이퀄리즘’이 상상하는 평등한 세계에는 차별과 혐오가 부재하다. 그리고 이 부재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먼저 ‘젠더 이퀄리즘’은 성평등의 대의명분에 동의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부당함을 인정한다. “여성에게 같은 일을 가르쳐라”라든지 “여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우하라”는 명제는 사회적 관계에서 여성을 남성과 같게, 혹은 대등하게 취급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에서 ‘같음’ 혹은 ‘평등’의 요구가 이미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변혁적 실천이라면, ‘젠더 이퀄리즘’에서 이는 반대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여성을 남성과 같게 대우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거나 ‘열등’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및 결론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평등’은 ‘여성’을 정치적 범주로

38) 나무위키 엔트리, 「나무위키 성평등주의 날조사건」, 2019.8.2.검색.

주장하고 조직하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여성을 남성과는 다른 객체로 타자화”하기를 거부하고 성적 차이를 초월하여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취급하는 실천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 ‘젠더 이퀄리즘’에서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차이로서의 여성성과 남성성도 의미하거나 그 차이를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범주로 구성해내는 구조적 힘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모순적이지만 그럴 듯하게 들리는 이 평등의 문법은 페미니즘의 언어를 선택적으로 차용하면서 페미니즘의 급진적 정치성을 제거한다. 차별과 억압을 통해 구성되는 정체성의 범주로서의 ‘여성’과 그 차별과 억압에 불구하고 살아가고 저항하는 행위자로서의 ‘여성들’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면서 여성의 권리와 해방,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페미니즘이 여성을 ‘타자화’하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젠더 이퀄리즘’의 문법은 페미니즘의 언어를 적절히 차용하면서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온정적 가부장제를 재생산한다. “이성간의 언행에 신경써라”라는 조언이 드러나듯, ‘젠더 이퀄리즘’의 세계에는 ‘이성(hetero-sex)’의 범주 및 관계가 불변의 변수로 존재한다. 달리 말해 ‘젠더 이퀄리즘’에서 ‘젠더’는 사실상 생물학적 본질로 전제되는 두 개의 성(sexes)으로 정의되며, ‘이퀄리즘’은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과 혐오는 해소되었지만 사적 영역에서의 이성애적 관계와 친밀성은 남아있는, 여성과 남성 간의 조화로운 공존의 세계를 상상한다. ‘젠더 이퀄리즘’은 젠더 갈등이 사라진 공적 영역과 이성애 로맨스와 친밀성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사적 영역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페미니즘 없는 양성평등을 꿈꾼다.

III. 페미니즘 없는 (양)성평등

페미니즘은 불평등한 젠더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또 만들어내는 개인적, 집합적, 사회적 실천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젠더 갈등’은 페미니즘의 높아진 가시성과 대중성, 그리고 정책을 매개로 하여 전달되는 ‘성평등’ 정치학에 대한 대중적 오해와 반발을 반영한다. 성평등을 더 이상 국가나 남성들이 베푸는 온정이나 시혜적 조치가 아닌 당연한 시민적 권리

로 인식하고 요구하는 여성들과³⁹⁾ 반대로 이를 국가와 여성이 공모하여 만들어내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과 불공정행위로 인식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젠더 갈등은 확산된다.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에서의 계층적, 성적, 세대적 불평등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더해지는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성평등 정책의 가시성은 젠더 갈등을 계층 및 세대 간의 불평등의 대리전으로 만들기 도 한다. 20대 남성들은 스스로를 기성세대 남성들과 20대 여성들 간의 정치적 거래의 희생물로 인식하면서 페미니즘을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 비판한다. 반페미니즘 담론에서 나타나는 공정성과 (진정한) 양성평등으로서의 ‘젠더 이퀄리즘’에 대한 주장은 성적 차이를 생물학적 차이로 환원하면서 제도적 개입이나 사회적 변화 없이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적 노력과 실천으로 구현되는 (양)성평등을 상상하면서 페미니즘의 사회적 의미와 정치적 급진성을 삭제한다.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과 젠더 갈등, 그리고 (양)성평등이 논의 되는 방식은 분명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특정하고 구체적이다.⁴⁰⁾ 정

39) 미투 선언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그리고 낙태죄 폐지운동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사법부도 유죄’, ‘여남경찰 9:1로 채용하라’ 등과 같은 구호들은 민주화 이후의, 그리고 여성정책의 제도화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과 국가의 관계를 새롭게 고민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일련의 사례들은 우리 시대의 페미니즘이 권리와 주권의 주체로서의 여성-시민의 위치와 가능성을 새롭게 의미화하고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 후기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더불어 기존의 성별 권력관계에는 변동과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남성의 권력을 해체하지는 않는다. 영미 국가들의 사례들을 참조한다면 포스트-포디즘의 질서는 기혼여성 노동력을 저렴하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동원하면서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약화시키지만 이러한 과정은 노동시장 내부의 계층화의 세분화와 심화, 그리고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의 약화와 더불어 일어났다. 서비스 산업, 문화 산업, 돌봄 노동 분야 등의 성장은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한편, ‘여성’을 특정한 종류의 노동자, 예를 들어 유연하고 창의적인 노동자로 구성하고 활용한다. 여성은 스스로를 차별과 억압의 희생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역능과 변혁의 주체로 구현하도록 요구받는다. 포스트 페미니즘과 신자유주의 담론의 만남 속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젠더 질서는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그리고 개인화된 불평등의 시대를 예고한다.

McDowell, Linda. “Father and Ford Revisite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6(4), 2001, pp.448-464.

McDowell, Linda. “Life without Father and For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책을 매개로 하여 수용되고 확산된 성평등 담론은 종종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실제적 의미와 효과가 달라지며, 많은 경우 통계적인 수치로 환원되거나 성평등 ‘지표(index)’로 번역된다. 다른 한편 언론과 디지털 공간에서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성평등은 본질주의 담론과 결합하거나 탈맥락화되고 파편화된 신자유주의적 공정성의 담론과 혼재된다. 페미니즘을 ‘불공정’행위로 비판하는 반페미니즘의 문법은 국가와 공권력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성평등 정책의 도입과 실천을 반대하면서 페미니즘을 개별 여성들의 노력과 성취를 통한 유리천장 극복과 동일시하는 포스트 페미니즘의 담론을 변주한다. 평등을 사회적 실천이 아닌 개인적 성취의 대상으로 정의하는 ‘젠더 이퀄리즘’과 유사-페미니즘의 세계관은 페미니즘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삭제한다. 페미니즘이 ‘사회적인 것’과 만나는 지점을 상상하고 언어화하는 시도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of British Geographers 16(4), 1991. pp.400-419.

McRobbie, Angela. “Reflection on Feminism, Immaterial Labor and the Post-Fordist Regime”, *New Formations* 70(1), 2011, pp.60-76.

■ 참고문헌

- 김보명, 「페미니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 사회』 118호, 2018.
- 김보명, 「촛불광장 이후의 젠더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 『안과밖』 46호, 2019.
- 김수아·이예슬,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의 구축」, 『한국여성학』 33권 3호, 2017.
- 김성윤,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 『문화과학』 93호, 2018, 93-119쪽.
- 김정혜, 「경찰공무원 성별구분모집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법학논집』 22권 2호, 2017.
- 배은경, 「젠더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한국여성학』 32권 1호, 2016.
- 엄기호, 「신자유주의 이후, 새로운 남성성의 가능성/불가능성」,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2011.
- 신경아, 「젠더 갈등의 사회학」, 『황해문화』 97호, 2017.
- 유정미, 「반격의 양성평등에서 (양)성평등의 재정립으로」, 『한국여성학』 35권 2호, 2019.
- 전지혜, 『경찰채용시 성별구분모집관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석사논문, 2007.
- 정태석 외, 「공정성의 역설」, 『시민과 세계』 32호, 2018.
- 정희진,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외,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2016.
- 정사강·홍지아, 「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미디어, 젠더, 문화』 34권 1호, 2019.
-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은 분석한다』 토론회 자료집, 2019.4.14.
- 황영주, 「강건한 “국가,” “페미니즘”의 약화」, 『21세기 정치학회보』 19집 1호, 2009.
- Connell, R.W. and James W. Messerschmidt,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and Society* 19(6), 2005.
- Jordan, Ana. “Conceptualizing Backlash: (UK) Men’s Rights Groups, Anti-Feminism, and Postfeminism. *Canadian Journal of Women and the Law* 28.1, 2016.

- McDowell, Linda. "Father and Ford Revisite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6(4), 2001.
- McDowell, Linda. "Life without Father and For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6(4), 1991.
- McRobbie, Angela. "Reflection on Feminism, Immaterial Labor and the Post-Fordist Regime", *New Formations* 70(1), 2011.
- Vida, Bianka. "New Waves of Anti-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trategies in the European Uni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Matters* 27(2), 2019, 1-4.

〈신문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국민일보, 「민감룡 “여경 확대 긍정적…치안 수요 맞춰 경찰 내 인력 변화 해야」, 2018.7.30.
- 경찰청 보도자료, 「전국 경찰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기준 만들어」, 2019.5.22.
- 경향신문, 「페미니즘 비판하던 ‘이퀄리즘’은 누리꾼이 만들어낸 ‘창작품」, 2017.1.31.
- 경향신문, 「“20대 여성은 페미니즘 등 집단이기주의로 무장하고 남성혐오 확산” 대통령 정책위 분석보고서 보니」, 2019.2.27.
- 경향신문, 「‘대립동 여경’ 논란이 뜻하는 것」, 2019.5.19.
- 나무위키 엔트리, 「나무위키 성평등주의 날조사건」,
<https://namu.wiki/w/%EB%82%98%EB%AC%B4%EC%9C%84%ED%82%A4%20%EC%84%B1%20%ED%8F%89%EB%93%B1%EC%A3%BC%EC%9D%98%20%EB%82%A0%EC%A1%B0%20%EC%82%AC%EA%B1%B4> (검색일: 2019.8.2.)
- 매일경제, 「대립동 여경 논란...경찰 원본 영상 공개에도 비난 더욱 거세져」, 2019.5.19.
- 손아람, 「차별은 비용을 치른다」,
<https://www.youtube.com/watch?v=cYuFnDyARBw>. (검색일: 2019.8.3.)
- 시사인,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2019.4.15.
- 시사인, 「20대 남자 현상, ‘반 페미니즘’ 전사들의 탄생」, 2019.4.22.

시사인, 「20대 남자현상은 왜 생겼나」, 2019.4.29.

오마이뉴스, 「젠더 갈등 푼다더니 ... 표창원 의원, 이게 최선입니까」, 2019.4.15.

중앙일보, 「하태경 이준석은 왜 ‘위마드’와 전면전에 나섰다」, 2019.01.08.

중앙일보, 「“여경 비하 멈춰달라” 경찰젠더연구회는 어떤 곳」, 2019.5.21.

중앙일보, 「“교통사고 났는데 여경들은 ‘어떡해’라고만 하더라”...진실은?」,
2018.09.29.

연합뉴스, 「경찰청장 “대림동 여경, 침착·지적인 대응...경찰 대표해 감사”」,
2019.5.21.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대 여성 10중 5명, 남성 10명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인식... 」, 2019.1.15.

BBC코리아, 「대림동 여경: 영상 논란이 남긴 질문 3가지」, 2019.5.20.

❖ ABSTRACT

‘Gender Conflicts’ and Antifeminism in
Contemporary South Korea

Kim, Bo-my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s feminist activism has regained prominence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ere have been recent increases in emotional tension and social conflict between young women and young men. In this paper, I consider cases of antifeminist discourse that view feminist activism as unfair and a selfish abuse of state power. It appears that such antifeminist discourse does not simply reject feminism, but additionally places it in an oppositional and contradictory relation to other categories of social justice, such as fairness. In so doing, antifeminist discourse not only undercuts the political radicality of feminism but also deprives the notion of fairness of its sociohistorical significance. Further, antifeminist discourse also replaces gender as a sociocultural structure of oppression and replaces the critical lens of social analysis with a naturalized and essentialized notion of biological differences.

Key Words : Feminism, Gender Conflict, Reserve-Sexism, Fairness, Gender Equality

■ 논문접수일 : 2019. 08. 10

■ 심사완료일 : 2019. 09. 01

■ 게재확정일 : 2019. 09. 03

